

분단체제의 해체, ‘변혁적 중도주의’ 제창으로 통일 논의 진작

글_ 서동만 상지대 인문사회대 교수

백낙청 교수가 《한반도식 통일, 현재 진행형》을 펴냈다. 이 책은 저자가 1998년 《흔들리는 분단체제》를 낸 이후 최근까지 거의 7년여에 걸쳐 발표한 통일과 관련된 글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번 책은 여러 모로 지난 번 것과 비교되는 바가 많다. 우선 제목부터가 전작에 못지않게 자극적이고 도전적이다. 올해 저자는 창비 창간 40주년을 맞이하여 문학평론서 《통일시대 한국문학의 보람》을 내놓으며 ‘통일시대’란 표현을 책 제목으로 삼은 데 이어 통일이 ‘현재진행형’이란 화두를 던진 것이다. 《흔들리는 분단체제》는 분단체제가 동요하면서 그것이 체제의 재편으로 갈지, 파국으로 갈지 모르는 불안정성을 강조하였다. 물론 저자 특유의 낙관적 전망이 기조로 유지되고는 있으나, 한반도 상황의 부정적 측면에 더욱 초점을 맞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이번 저작은 ‘분단시대’가 이제 ‘통일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표현처럼 한반도 상황의 긍정적, 발전적 측면을 훨씬 부각시키고 있다. 저자의 일관된 분석틀인 분단체제론에 따르면, 이제 한반도 분단체제가 동요기를 넘어서 해체기에 들어서고 있다는 새로운 정의까지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정의는 저자가 2005년부터 6·15공동위원회 남측 대표로 취임하여 민간통일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남북 관계를 타개하는 데 기여한 실천적 경험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글을 읽는 독자라면 작년 민간 통일운동의 책임 있는 직책을 직접 맡기 이전부터 저자가 줄곧 통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대응하여 일선에서 집필활동을 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통일운동 분야에서 지행합일, 이론과 실천의 일치로 지향하는 보기 드문 저작으로 꼽힐 것이다. 저자는 이 분야의 첫째 저서인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까지 합치면 3권의 저작을 낸 셈이라 그를 더 이상

인문학자로만 볼 수 없게 한다. 저자가 문익환 목사를 기려 제정된 늦봄통일상의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실천 활동이 주된 이유겠지만, 이러한 지속적인 저술 활동도 그에 못지않은 요인으로 평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책 속의 글들은 모두 1998년부터 2006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한 내부, 남북 관계, 동북아시아 지역 질서, 세계정세 등에 관한 해당 시점마다의 포괄적인 정세 진단으로 채워져 있다. 각각의 글들은 대체로 집필 시기에 따라 제 1부는 저자가 통일운동의 실천적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2005~2006년, 제 2부는 6·15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1999~2001,2년 시기, 제 3부는 그 중간에 해당하는 2002~2004년 시기 등 3개부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전작인 《흔들리는 분단체제》에서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란 개념을 설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6·15시대란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여 분단시대의 지속이면서 통일시대의 들머리에 해당한다고 정의할 수 있었다. 즉 이 시대를 “분단시대 겸 통일시대”로 특징지으며 앞으로 있어야 할 통일을 향한 창의적이며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하였다. 다만 2004년 시점까지는 여전히 이 시대를 분단체제의 ‘동요기’로 역시 통일시대보다는 분단시대에 강조점을 두고 있지 않았나 싶다. 따라서 이 책 제 2, 3부의 글 속에 유지되는 기조는 분단체제론의 ‘암중모색기’라고나 할까 일종의 과도적 정의라는 느낌을 준다.

그런데 저자가 본문 속에서도 인정하듯이 2005년 6·15와 8·15 행사를 거치면서 시대 규정을 적극화하여 흔들리는 분단체제가 “분단체제 자체의 종식”으로 이어질 “해체기”에 들어섰다고 선언하기에 이른다.

이 해체기를 파국을 피해 통일로 향하도록 한반도 민중의 힘을 모아 지혜롭고 창조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요청되는 작업이 한반도 특유의 통일방식으로서 국가연합임을 이 책의 곳곳에서 역설한다. 무엇보다도 힘을 기울여

설명하는 부분이 국가연합이 당위적이거나 희망적인 목표가 아니라 당대에 실현가능한 현실태라는 데 있다. 저자가 최장집 교수에 대한 실명비판에서 보듯이 거의 도발적이다 싶을 만큼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남북정상회담 직후 활발히 전개되던 통일논의가 부시 정부 등장 이후 조성된 북 핵위기로 잦아들고, 급기야는 일부 진보학계에 통일을 배제한 평화나 한반도 전체가 아닌 남한 일국만의 개혁을 논하는 흐름이 생기는 데 경종을 울리며, 통일 논의를 활성화시켜 보려는 운동적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는 간략한 개요이긴 하지만 1945~53년(분단체제의 준비기 내지 형성기), 1953~60년(체제화 초기의 진통기), 1961~1987년(분단체제의 고착기), 1987년 이후(분단체제의 동요기)로 시대구분을 시도하고 있다.

나아가 고착기와 동요기는 몇 개의 국면으로 다시 세분화된다. 현재 한국의 정치경제체제가 1987년 체제인가 1997년 체제인가 하는 쟁점에서도 나타나듯이 동요기의 개시 시점을 언제로 잡는가 하는 점, 또한 저자가 중시하는 동요기와 해체기는 언제를 기점으로 구분하는가 하는 점 등 앞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아직 시론적 단계이긴 하지만 분단체제에 관한 시대구분을 피한 것은 이론화 작업에서 일정한 진전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 책이 중점을 두는 것은 분단체제의 해체기란 남북 관계의 변화를 넘어서 남북 각각의 체제 내부 변화도 포함하는 “남북의 점진적 통합과 연계된 총체적 개혁의 시대”이기도 하다는 논리에 있다. 특히 NL, PD계열 뿐 아니라 집권세력 내부의 중도적, 개혁적 세력까지 연대하는 ‘변혁적 중도주의’를 제창하고 있다.

저자가 올해 들어 부쩍 힘을 들여 주장해 마지않는 중도주의 지향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일관해서 견지해 온 것임을 이 책은 알려주고 있다. 저자가 과감한 실명비판을 피하는 또 다른 의도는 이 지향이 절충적이거나 타협적인 전술적 방책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고유한 성격을 지닌 전략적 노선이란 점을 부각시키려는 데에도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진보학계 내 모처럼의 활기 있는 문제제기에 최장집 교수의 대응으로 생산적 논쟁의 전범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 책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과학서는 아니지만, 적어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해하고 실천해 가기 위해 전문적인 학자에게든 일반시민에게든 최소한도로 요구되는 공부와 판단의 범위와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어

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고 있다. 이는 바로 저자의 인식과 분석의 틀인 분단체제론의 구성요소와 일치하는 바이기도 하다.

즉 남북 각각의 국내 상황(국내체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속의 남북관계(분단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정세(세계체제) 등 세 부분이다. 분단체제론이란 이론들의 수용 여부와 별개로 그 구성요소들에 대한 최소한의 정세판단 역량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이미 과거 분단체제론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이 세 가지 수준 및 그 연관관계의 분석에는 상당히 복잡다단하고 구체적인 작업이 수반되며, 어느 한 가지의 작업만으로도 쉬운 일은 아니다. 또한 여기에는 단기, 중기, 장기의 변동과 실천과제라는 시간적 차원까지 개재되고 있다. 하지만 저자는 적절한 균형을 견지하며 각 수준의 핵심적 요소를 추출해 내면서 정세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다.

어떻든 저자 스스로 한반도의 장래와 관련하여 전 지구적 시안부터 남한 내부의 지역적 시안에 이르기까지, 미국 패권주의의 향방이나 한국의 새만금 사업, 심지어 박정희시대 평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쟁점에 관해 일정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점은 사회과학 분야 연구자들에게는 체계적으로 답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한**